광주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본격 가동

5개 분야 전문가 33명 드림팀 구성
인재·기업·지역사회·대학·성과지표
'RISE 계획' 내년 국비 반영 대응
16개 추진과제 세부실행계획 수립

광주시가 2025년 정부 예산편성에 대응하고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세부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드림팀'을 가동한다.

광주시는 4일 (재)광주테크노파크 대회의실에서 시교육청, 인공지능산업융합단, 광주연합기술지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12개 기관과 11개 지역대학의 각 분야 전문가 33명으로 구성된 라이즈(RISE) 분과위원회 출범식을 개최했다.

각 분야 전문가는 △인재 스킬 업(SKILL UP) △기업 밸류 업(VALUE UP), △지역사회 그로우 업(GROW UP) △대학 라이즈 업(RISE UP) △성과지표 등 5개 분과에서 활동하며, 매주 분과별 회의를 통해 16개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광주시는 2025년 국비 반영을 위한 첫 단추로 지난 1월 정부 중기사업 계획 등록을 위한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교육부가 국정과제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혁신'의 하나로 대학지원의 행·재정적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이양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정책이다. 2025년부터 연차적으로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예산 50% 이상을 시도에 지원한다.

광주시는 광주 라이즈(RISE) 기본계획의 비전을 '지역과 대학이 함께 업(UP) 그레이드'로 정하고,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과 실증의 지산학연 협력생태계 구축 △집단지성을 활용한 지역현안 해결 △대학의 직업·평생 교육 확대 등으로 목표를 정했다.

세부 추진과제로 △광주 미래고급 인재 양성 △지역 일자리-취업 연계 구인·구직 플랫폼 운영 △광주형 창업밸리 기반 스타트업 아카데미 운영 △기업 개방형 혁신연구실 운영 △테크스튜디오 실증 선도대학 지원 △도심 캠퍼스 리빙랩 운영 △광주다움 통합돌봄 연계 보건복지 활성화 △광주 문화예술·관광 도시공간 활성화 사업 등 16개 분야를 선정했다.

이를 위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국비 5000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사업비 6250억원을 투입, 지속할 수 있는 라이즈(RISE)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앞으로 교육부 상담(컨설팅)과 분과위원회를 통해 라이즈(RISE) 기본계획을 수정·보완하고 대학 실무협의체 협의를 거쳐 오는 11월 18개 대학 총장이 참여하는 '대학·지역인재 육성지원 협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확정 할 예정이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는 광주시와 대학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으로,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어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계획을 수립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육도시 광주'를 만드는데 초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광주시, 장애인 1인당 연 35만원 평생교육 지원

광주시가 장애인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비를 지원한다.

광주시는 4일 교육부 공모사업 '2024년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사업'에 선정돼 5월부터 이용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장애인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회적 포용성 증진을 위해 추진됐다.

광주시는 공모 선정으로 국비 6200만원을 확보하고, 여기에 시비를 더해 총 사업비 8800만원을 투입해 자치구별로 19세 이상 등록 장애인 50명씩 총 250명에 대해 1인당 연간 35만원의 평생교육이용권을 지급한다.

장애인 평생교육이용권은 5월부터 보조금24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광주시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을 우선 선발할 예정이다. 단, 올해 시민 대상으로 선정한 평생교육이용권 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급자는 제외한다.

선정결과는 6월 중 신청자의 휴대전화와 전자우편 등을 통해 개별통지한다. 선정된 장애인은 이용권 카드(NH농협)를 발급받아 평생교육이용권 누리집(www.lllcard.kr)에 등록된 평생교육기관 프로그램을 35만원까지 수강할 수 있다. 광주시는 평생학습 우수이용자에 대해서는 35만원권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김동현 교육정책관은 "공모사업으로 지역 장애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며 "장애인 학습자와 일반시민의 평생교육 기회가 확대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김이강 서구청장, 전지훈련 방한 펜싱팀 격려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4일 서구 염주체육관 펜싱훈련장에서 전지훈련을 위해 방한한 대만과 싱가포르 코치와 학생 20여명에게 환영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광주 서구 제공

광주시, 제1공공하수처리장 효율화 방안 찾는다

광주시가 서구 유덕동 제1공공하수처리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실시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기술진단은 하수도법에 따라 전문기관을 통해 5년마다 시행하며 하수 유입오염물질의 특성조사,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진단, 시설개선 및 효율화 방안, 유지관리 등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파악해 5개년 계획으로 개선대책을 수립한다.

이번 기술진단은 11일부터 12월 말까지 하수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전반에 대해 진행된다.

광주시는 기술진단을 통해 제1하수처리장 공정 효율화와 시설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하수처리 공정과 시설 관리 실태를 정밀하게 진단, 처리효율을 개선해 방류수역 수질관리에 대처한다.

광주시가 지난 2021~2022년 제1하수처리장 및 분뇨처리장에 대한 악취기술진단을 실시한 결과, 노후된 악취저감시설 전반에 대한 개선 및 교체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올해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업해 국비 29억원을 확보(총사업비 69억원), 2025년까지 악취 정비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악취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불편이 상당부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곤 물관리정책과장은 "기술진단 결과를 토대로 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해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하천 수질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에 담양·보성·완도 선정

보행자 전용도로·무장애시설 설치
"이달 말 사업 추진 올해 준공 목표"

전남도는 2024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 공모를 통해 담양, 보성, 완도군을 선정했다고 4일 밝혔다.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주차장, 화장실 등 10년 이상 노후 관광편의 시설의 보수뿐 아니라 독특한 관광지가 되도록 새로운 콘텐츠 보강, 관광 약자 배려를 위한 무장애(Barrier-Free) 시설 설치 등을 추진하는 전남도 자체 시책 사업이다. 2018년부터 14개 노후관광지에 243억원을 투입했다.

이번 노후 관광지 재생사업은 관광학과 교수 등 외부 전문가 3명을 평가단으로 위촉해 노후시설과 관광 안전시설 보수, 주변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시설 설치 및 콘텐츠 보강을 중점으로 서류와 현장평가를 거쳐 선정했다.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보성 율포 해수욕장 관광지는 아스팔트 차도를 보행자 전용도로 전환하고, 우기 시 배수가 원활하지 못한 주차장을 정비하는 등 관광객 편의에 중점을 둬 새 단장 한다.

담양 담양호 관광지엔 건립 예정인 국제 명상센터와 연계해 관광객 체류 시간을 늘려주는 야간 경관 사업과 관광지 주변에 어지럽게 설치된 전선 지중화 사업을 추진한다.

완도 명사십리 관광지엔 인위적 시설을 배제하고, 본격 개관한 해양치유센터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불편 없이 깨끗한 백사장과 바다를 즐기도록 무장애 시설과 포토존 등을 설치한다.

전남도는 노후 관광지 사업 대상지에 보조금을 교부하고, 이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올해 안에 사업이 준공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석호 전남도 관광개발과장은 "이번 노후관광지 재생사업은 노후시설을 개보수해 관광객이 다시 찾고 싶도록 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것에서 출발했다"며 "가급적 인위적 시설물은 지양하고 전남의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도록 시설 및 콘텐츠를 보강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고흥 우주해양 특구 일부,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전남도는 4일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로 묶인 영남면 남열리 일원 1.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고흥 우주해양리조트 특구는 고흥 영남면 남열리 115만㎡로, 지난 2009년 숙박시설과 골프장·짚트랙 등 관광단지를 조성기 위해 지정됐다. 하지만 14년 동안 민간사업자의 토지 매입률이 14%에 그치며 표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전남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토지매입 부진에 따른 사업 지연으로 특구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특구 지정이 해제된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키로 했다.

이번에 해제된 영남면 남열리 지역은 앞으로 고흥군수의 토지거래 허가 없이 자유롭게 토지 거래가 가능하고, 기존에 허가받아 취득한 토지의 이용 의무가 없어진다.

김승채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투기적 거래가 우려되는 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곽지혜 기자

광주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지원

근로자 50인 미만 중기 대상

광주시는 소규모 민간사업장의 산업안전 인식 강화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 대상은 공고일 기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근로자수 50인 미만의 중소기업이다. 광주시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업체별 산업재해 발생현황, 산재예방 관련 교육 이수,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도, 근로조건 개선 등의 기준을 평가한다. 특히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자 의견청취절차 반영 여부, 고위험 5대 업종 기업 등 가점 항목을 포함해 총 10개 기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사업장 작업환경 개선자금 200만원 지원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중소기업육성 경영안정자금 우대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개선자금은 근로자 휴게실을 비롯한 작업환경 및 시설 개선, 안전보건 관련 장비 구입, 산업재해예방 교육 실시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17~18일 광주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고해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시 안전정책관 중대재해예방팀(062-613-49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윤건열 안전정책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지역 소규모 민간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며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와 산업안전 인식 강화, 안전한 근로환경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 기자